

사설

새로운 발전의 전기 마련하자

민주적운영이 외대발전의 길

지난 8개월 동안 외대 구성원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맛보았다. 연초에 재단의 이권자용에서 시작하여 학교가 인수선택지더니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한바탕 난장판을 치른 것이다. 급진들이 각 대학들이 교육개혁 및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 대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소모전을 치르며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세 학기에 새로운 재단이사장과 새로 선임된 총장으로 학교 정상화 및 재도약의 국면을 맞이하였으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의 학내 분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치 도리배들이나 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일들이 산발하면서도 행해져 왔음을 목격하였다. 그러한 일들이 과연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일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문해볼 여지가 있다. 학자나 지식인의 양심은 차치하고 법밖의 입장에서 보아도 정제불명 조직(?)들의 행동거지와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이었다. 고성과 억지 대신에 학자의 절제력과 양심의 목소리를 태연히 했다. 또한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수효의 대학 구성원들이 묵묵히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와 발전을 위하여 정당하게 노력해 왔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위상은 그 동안 추락을 계속해 오다가 근년에 들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학대학으로 성장하는 등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우리 대학의 정 구성원은 지나간 아픔을 숙히 잊고 재도약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선임 임원층 이사장은 새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재단이 학교를 지배하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 대학을 앞서는 데모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여 외대인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조규철 총장은 취임사에서 오로지 대학 발전과 개혁을 위하여 매진하겠다고 천명하였으므로 총장 결선 시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2차 외대발전 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규철 총장은 외대에 지향해야 할 목표로써 공익성과 공공성인 준수, 총부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민주적 대학운영, 외국학 특화로 외대의 정체성 확립 등을 제시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다. 우리 대학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었다. 일찍이 외국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여 세계화에 기여해 온 우리 대학이 다시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특화된 정 전문 교육기관의 몫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 조직원, 학생이 생위일체가 되어 우리의 선배들이 쌓아온 빛나는 전통을 되살릴 때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비운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명문사학으로 다시 우뚝서야 한다.

출판사 HAN/Networ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Foreign Studies/Foreign Studies

한국의 소리

글을 읽습니다.
● 작자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① 재단 설립 ② 미래 재단인 수혜자 존·민익권
● 매수 2000 원고지 4매
● 마감 매수 마감일 오후 8시
● 발행 학생기자실(학생기자) 전담 발행 또는 컴퓨터실(학생기자) 내부(2000년)
학내외에서 글과 그림을 다듬고자 하는 분은 특별취재를 가지고 외대인의 (신문)에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고, 외대인의 (신문)에 올릴 때는 꼭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외대인에게 있고, *한인 신사관계가 있고, *외대인의 (신문)에 올릴 때는 꼭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교육부부터 개혁을

"부실한 교육여건과 방만한 학교운영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폐쇄를 결정하였다"라는 짧은 이 한 문장을 신문들 통해 접했을 때, 혹시 우리 학교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한려대·광주예술대 폐쇄'라는 제목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려대학교의 설립자인 이흥하씨는 현재 광양대학교, 서남대학교, 광주예술대학교 등 4개 대학을 포괄, 3개 고등학교 및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외대부터 거의 한 해에 하나씩 학교를 설립해왔으며, 각 대학 총장 및 이사들을 대부분 이흥하씨의 친인척으로 구성하여 정황을 지켰다.

한려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이 일반 대학 학생의 대를 이자를 갚는데 유용되거나 타 학교의 건설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을 벌이며, 학교 공금 400여원을 횡령하였다. 학과 사무실과 조교, 수위기 없는 이런 부실 운영학교에 교육부는 97년 3월에 돈다시 같은 설립자에게 광주예술대 설립하게 해 주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내려진 이번 조처는 교수총회과정의 비리, 부실한 재단운영·재단 내 분규 등 세가지 사해단 비리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의 외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흥하씨가 거액의 등록금을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러서 야기된 이 사건의 피해는 모두 학생과 교수만 저야 하는 것인가? 이흥하씨는 병 보석금 1억원과 내고 석방되어서 다시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한려대·광주

예술대 폐쇄에 대해 정부, 특히 교육부는 뒷맛이 쓰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게? 물론 사법부의 범죄수법은 있어 재단과 이사장 및 그 하수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 국민, 아니 최소한 대학구성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그것을 감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교육부 관계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거짓말인 '원인이 부족하다'는 말을 믿어 주더라도 이미 밝혀진 범죄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조처를 취하면서 그 범죄집단을 용호하고, 같은 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가? '역대 정권들과는 다르다'라는 청천을 들고 싶다면 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학생들의 수업 거부·시위·서명 등으로 이루어진 비리 재단 이사장 퇴진이후 그 자리를 채우는 관련 이사장들 때문에 더 학교가 파멸으로 치닫는 경우는 무엇때문인가? 혹시 약 2년 후 총 박승준 전 전무이사? '외대는 내 재산이야'라고 외치고 외쳐대며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재단 대와 개혁한다고 하부제나, 대학 자율화나라는 훌륭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교육부부터 개혁을 하고 민생을 해야하지 않을까?

신우식(동학·미인여 4)

학생회관을 학생회관 담게

며칠 전 학생회관 3층 자판기 안에 있는 캔음료수 창고? 파손되고 그 안에 있던 음료수 박스가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또 며칠 후에는 학생회관 1층 공동전화기가 파손되어 땅에 굴러다니던 사건이 있었다. 이제 학생회관

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슬쩍고 싸움을 하여 기쁨을 파손하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더불어 학생회관 곳곳을 둘러보면 갖가지 쓰레기통을 몰고 있지만, 누구하나 청소하는 사람없이 싸여가고 있다. 지난 1학기 우리 외대인들이 벌였던 투쟁은 외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학교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며 외대발전을 가로막고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하던 박승준 전 전무이사(사)를 축출하고 전구성원이 개혁과 발전의 토대를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제 외대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 외대인과 우리의 자치공간인 학생회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되짚어보자.

학생회관은 우리의 자치공간 또 하나의 교육현장이다. 그리고 7천 외대인 모두를 위한 곳이다. 학생회관을 학생회관답게, 이제 그 모습을 함께 바꾸어 볼 것을 외대인에게 제안한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하여 학생회관을 깨끗하게 하자. 학생회관 3층의 과방 중에는 거의 쓰레기장처럼 된 곳이 많다. 들어간 쓰레기 박스는 남에게 잔존을 한다. 여차다 청소를 하더라도 캔과 종이류, 병 등이 아무렇게나 비닐에 담겨 버려진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는 어찌생각

서 직접 손으로 골라내야만 한다. 분리수거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환경은 물론 우리의 자치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자.

둘째, 학교기쁨을 함부로 파손하지 말자. 학생회관 3층 남지정장은 기쁨과 반반반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세 번째와 소변기가 항상 파손되고 복구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의 시설은 우리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모든 외대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발 도난사고도 없도록 하자. 학생회관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올때도 가방의 도난을 걱정해야 한다. 외대인들의 소행이라고 보기에 너무도 대담한 용모로 참고까지 뒤흔치고 있다. 박승준과 같은 도둑심보를 절로 보는 우리 외대인들이 조금이라도 감아서 되겠는가?

외대는 변화하고 있다. 이제 외대의 변화를 일구어낸 주체, 우리 외대인의 변화로 학생회관을 바꾸어보자.

재정호(사할·노여 4)

책을 소중히 간직하자

9월 1일 개강일 나는 학교 도서관에 갔다. 하지만 개강에 대한 기대감은 그 날 아침에 깨어났다. 내가 가방에 넣어 두었던 사정이 사라졌던 것이

다. 본인은 장군이 '러시아'인 관계로 사정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데 그 중에 '러시아-한국어 사전'(주부 출판사)이 없어졌다. 처음에 몇 번 찾아보았지만 없어져서 혹시나 해서 집에도 갖고, 주위 여러 책상을 둘러보기도 하였지만 사정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확실했다.

아마 러시아어를 한 번쯤이라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노란 색 표지의 그 사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 알것이라고 생각된다. 한참 생각한 후 억울하지 만 책 찾은 것을 포기하고 다시 새 책을 사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어느곳도 사정이 팔리거나 판매되지 않았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천천히 한 책방을 한집 한집 둘러다니며 간신히 책을 구입할 수 있었다.

나의 개강 한 주는 이렇게 책 찾느라고 보내졌다.

비록 개강 첫날에 사정을 잃어 버려서 며칠간 공부도 못하였지만 오히려 사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만으로 좀 좋지만 사정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잃어버리기 전에 소중히 책을 간직하는 외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국(사할·노여 4)



한 교수의 기다림

박재우 (중국어와 교수)

아닐까?

교수신문보존회의는 노정권에게 지금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수를 3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정부가 들어선 금년 3월에 탈락한 15명이 포함될 수 있다. 재단의 무능과 정권의 회의하는 사관대교수 9명 파면, 6명 재임용 탈락 및 청주대 교수협의회 회장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아직도 이 문제의 해결이 요망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교수재임용제의 폐해는 이제 오늘

의 일이 아니다.

유신체제가 기승을 부리던 1975년, 비관적인 지식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된 이 제도는 많은 해직교수를 낳았다. 우리 대학 임원들은 신임 이사장으로 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탄압에 의해 4년간 해직당한

필자가 5, 6명 사립 "재임용 탈락"된 여러 "하는" 건담 속에서 서명 교수 때문에 통행했던 기억이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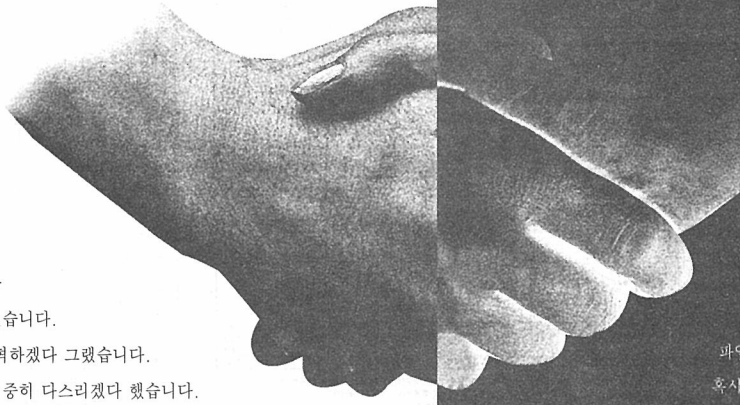
그후 교수재임용제는 폐지의 여론이 높았으나 90년 3월 국회의 사학 재단연합회의의 강한 로비에 밀려 다시 현재의 계약된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켜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사립 대학 재단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게 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교수들에게만 할말거를 달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할 것이다. 지난 8월 초 헌법재판소에서 교수재임용제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제 교수재임용제는 전 부나 비리파괴에 비관적인 교수에 대한 탄압수단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실적에 근거한 철저한 심사제로 바뀌어야 한다.

오직 학문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만 운용되어야 한다. 정치민주화는 되었다고 하나 사회 각 분야 무한한 작은 독재권력들에 의해 사회민주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와 교육성과는 우수하나 비리와 청렴의 재단에 밀려났다고 해서 추방된 한 교수간의 악랄한 해직 교수들의 타격을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아닐까.

신(新) 노사관계가 신(辛) 노사관계?



김대중 정권은 대립이 아닌 협력과 양보의 노사관계라는 신(新) 노사관계를 표명하였습니다. 고분고분하고 하고 개별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족자주론 외대화보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목) 회사측의 고용협약파기로 농성에 들어간 만도 노동자 2400여명을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해 버렸습니다. 노사협약은 어진 회사측은 문제만제하고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만 대운맛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 신(辛) 노사관계 아닌가??

▶ 나보기 - 변형윤 신임 이사장

“학교에 득되는 재단 만들겠다”



취임사에서 재단운영의 5가지 원칙을 표현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서울대에만 40년 넘게 있다보니 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대학이 정부나 재단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학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이사장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 교수나 학생들이 바라는 바가 합 의되고 그것을 총장이 집행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재단의 역할을 학교에 대한 투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인가 재단은 지원해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총장의 역할을 커질 것이다. 이 말은 재단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할 일이나 권한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방향에 비추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개입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된 재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재단에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높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나, 학생들이 이 부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나는 그중에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민주적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협의회의 제도와 학생, 직원 등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완전한 형태의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의견이 있는데 나는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 서울대의 교수회의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 그때는 교수회의가 의결기구로서 명실공히 하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다. 그러나 군사정변 이후 교수회의는 심의기구로 전락해 버렸다. 교수협의회의는 명칭도 교수회의가 되었고 기구도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체다. 그러나 총장직선제는 교수들이 의해서만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대학은 역시 교수 중심이다. 학생은 기

본적으로 교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다. 그리고 직원들은 교수와 학생이 학문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수들이 그들의 의사를 듣고 잘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나 직원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상설위원회나 대학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이 직접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 물론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내가 구상원들을 최대한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체계가 성립하지는 않더라도 요구는 다 들고 받아주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기다려 주었으면 한다. 그래도 안되면 하는 수도 있지만, 단정적으로 '이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자.

한재 파악된 동원한 재단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단과 학교는 한재 파악된 동원한 재단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단과 학교는 한재 파악된 동원한 재단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재 파악된 동원한 재단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단과 학교는 한재 파악된 동원한 재단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단과 학교는 한재 파악된 동원한 재단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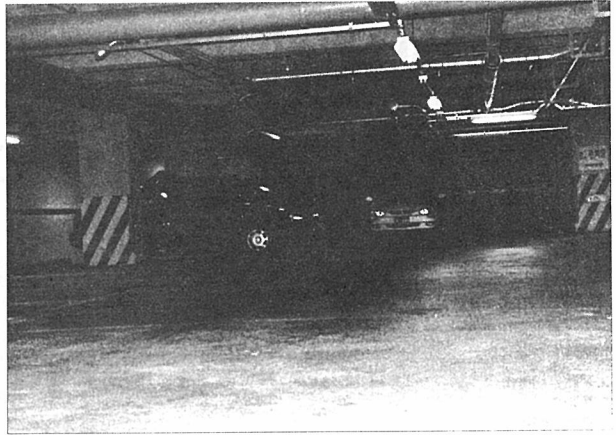
투자계획의 경우 총장이 현재 학교발전방안이나 재원마련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투자계획은 장기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 문제나 우선은 조그맣게 학생생활권 확대나 교수들 연구비 인상 같은 것이나 할 것이고 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것이다.

관선이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가 또 관선이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가 또 관선이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가

이숙경 전이사장이나 박순진 전 이사가 다 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구상할 의사가 있는가 재단과 학교는 이숙경 전이사장이나 박순진 전 이사가 다 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구상할 의사가 있는가

‘외대총학생회’라는 모임의 주장을 접해 본적이 있는가 그 단체와 공식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으나 그들의 주장은 대강 알고 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왜 정장직선제를 단어를 쓰느냐는 것이다. 학교총장이 비정장직인 교육부가 관선이사제를 보낸 것 아닌가. 그러나 주장하는 행위 자체는 무리고 할 수 있겠다. 나의 원칙은 누구든 만나고 하면 만나는 것이다. 그쪽에서 요구하면 만날 수는 있다.

총장선출을 위한 이사회의 코리안호텔에서 열릴 때 학생들이 조공이라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호텔에 갔었다는 결국 돌아가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본다. 이사회를 열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꾸 교관을 시키면 안되지 않겠는가. 주정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도리어 미나리는 어이로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이 안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불편-불법

학교 곳곳에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서울배움터 교수연구동 지하주차장은 항상 공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앞이나 학교단 건물 앞의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차량이 가득차 있어 좁은 서울배움터를 더욱 비좁게 하고 있다. 이는 교수연구동 지하주차장이 학교밖에서 진입하기 불편하고, 지하로의 조건배우에 교수·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승희 기자

“비리교수에겐 수업 못 받는다”

수업재개에 학생반발... 조속한 징계 요구

재단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박순진 전 재단 전무이사와의 유착했던 교수들의 수업 재개 문제로 양 배움터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본보는 이를 밀착취재하고 학생들의 동향을 알아봄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이해에 대해 교수들의 수업시간 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배움터 교수 김형대 주임은 “대학단에서 징계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관련 교수들을 징계해야 비리교수는 교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관련교수를 역시 행정상으로 다른 교수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 수강신청기간 동안 학생들은 재단비리 문제를 일으켰던 몇몇 교수들의 수업이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대조보를 붙이는 등 재단비리 문제 완전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배움터 학생회’와 ‘정문’에 붙여진 것은 ‘부정 편입학문제를 일으킨 유성수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바 다른 재단비리 연루 교수들의 수업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양배움터 총학생회는 재단비리 해결 투쟁 중 하나로 ‘구악일소’ 없이 는 의대발전 역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박민정(통·체·코어 4)은 “그토록 비리문제는 교수가 신성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며 “학내에 재단비리 문제의 씨를 없애기 위한 투쟁



취재특수

학생처의 선부른 행동

개강후 용인배움터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학생회 및 일꾼들의 선진활동. 각 동아리들의 선진화 및 모집 선진으로 분주하기만 하다.

이 분주함 속에 사암학대(사대) 학생회의 ‘조규철총장 아들의 편입학 비리의혹’ 진상을 규명하러’는 플랜카드와 전 총학생회 기구보장 명의의 ‘조규철총장 선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조보를 수거, 훼손한 학생

처 간의 마찰이 있었다. 특히, 전 총학생회 기획부장은 학생처 앞 복도에 ‘조규철 총장 선임을 반대한다’는 대조보를 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학생처는 이 대조보를 찢었다.

이 사건으로(대조보의 내용을 떠나) 학생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간 학생처도 비난을 면치 않게 됐다. 대조보 내용의 훼손과 그

정부수립 국가보안법제정



건국 50주년을 맞아 제 2의 건국을 이루자고 떠돌석합니다.

지나온 50년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찬란한 역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0년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내 민족, 내 형제를 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역사였습니다.

폭압적 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던 수많은 우리 민중을

피흘리게 한 것도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도 뭐가 쟁기는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노동자와 청년 학생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립 50년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올해를 국가보안법 철폐 원년으로 만듭시다.

민족자주권
외대화보

경제성장의 열매, 없는자에겐 '그림의 떡'

**경제 성장제일주의,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경제성장의 한상 ①
경제성장이 만인의 부(富)를 보장할 수 있는가
3. 경제성장의 한상 ②
세계경제질서 내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매진하면 한국이 경제대국 될 수 있는가
4. 경제성장의 한상 ③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시장이테올로기의 정점, 세계화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5. 인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중심의 성장, 만인을 위한 경제체제, 민족강국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적 경제토대를 고민하자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자본과 기술이 빈약하므로 오로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풍부하게 양성해서 값싼 상품을 만들어 무조건 수출해 외국돈을 많이 벌어야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사회가 온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오면서 들었고 믿어왔던 논리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30여년동안 이 논리에 따라 수출지상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경제성장을 위해 온 국민이 열심히 매진한 결과, 국민총생산(GNP)과 해외수출액은 날로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의 소비수준도 증가했다.

그렇다면 30년동안의 고도성장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가?

경제성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조건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측은 주로 정부와 재벌, 경제계, 전문직 종사자, 금융업자 등 아무런 문제없이 식탁에 음식물을 차릴 수 있는 20%도 안되는 부유층이다. 그러나 나머지 80%에게 생활이 나아진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보다 최저생활임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일정수준의 일자리의 가족들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 자식들의 교육 등 안정적 생활조건을 원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유하지 못한 다수에게 선심쓰듯 선포한 '경제성장'이 실제로 그것을 주장한 부유층에는 이득이 되지만, 부유하지 못한 다수에게는 안정적 생활조건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경제성장의 본질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이미 형성된 국내 저임금노동력과 결합되면서 경제발전방향을 급속한 성장경로에 올려놓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외국자본과 결합한 재벌기업들이 비대한 몸집을 드러내었다.

이들 재벌기업은 국내시장의 보호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해나갔다.

그러나 고도성장은 곧 경제안정의 대의유출 확대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성장의 견인차구실을 했던 수출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전자 상표부착(OEM)방식이라는 국제화정당협정을 맺고 있었고, 그 결과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출수출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자본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가능한 한 판매가격을 높이면서 제조원가를 낮추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수출자체가 국제화정당협정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수출가격 결정은 일방적으로 외국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조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주어진 외화 생산실비와 외화부품을 사용하는 한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남는 것은 인건비, 즉 임금을 낮추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자본은 임금을 낮추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그 결과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생계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임금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의 덕으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혜택을 받으면서 이만쯤이라도 살고 있지 않느냐

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저소득 국가였던 우리나라에 현대적 공장과 초대형 유조선, 고속도로, 텔레비전, 그리고 얼마 안되는 여유있는 계층을 위하여 건립된, 세련된 전자제품이나 패션제품을 두루 갖추고 예리한 시설까지 완비된 쇼핑센터가 만들어졌다.

넉넉치 못한 다수의 생활이 절대적 의미에서 악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부유층은 경제적 및 정치력을 강화하면서 부를 쌓아간 반면, 광범한 임금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그에 따른 소외가 심화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각 개인은 한정된 환경적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돈을 많이 가진 자는 언제나 번함없이 그 경쟁에서 이긴다. 경제성장은 빈곤층의 수입보다는 부유층의 수입을 더 빨리 증가시켜왔던 것이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행해지는 자본배분이 고도성장으로 인해 팽창된 총액에 빈곤층보다는 이미 부유한 계층에 훨씬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고, 빈부간의 절대적 격차를 더욱 크게 벌여나, 나아가 빈부간의 격차에 대한 부유층의 권력 특혜를 증강시킨다.

현재의 어려움, 경제성장으로 해결가능한가

그러나 이 모델도 1990년대에 이르러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진국으로부터 덤핑관세를 받는 등 통상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경쟁국이나 후진국으로부터는 끊임없는 가격경쟁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운동의 급성장으로 더 이상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병영적 노동통제 등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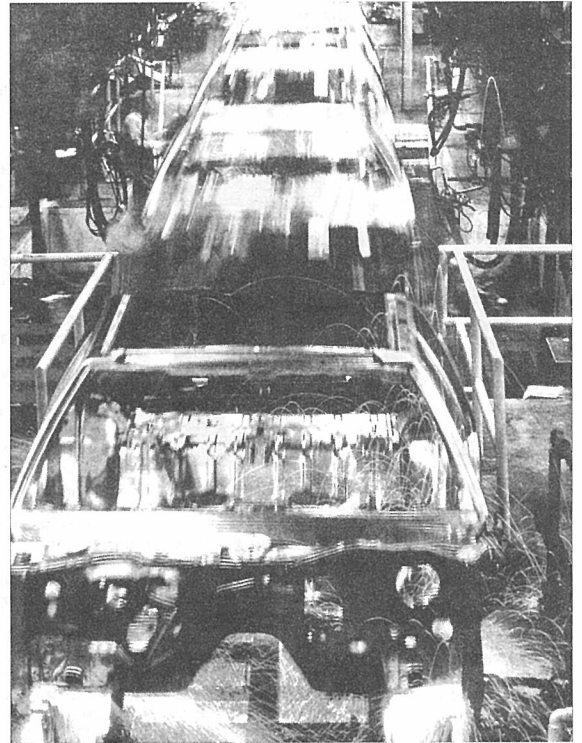
90년대 초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으로 1백일 계획, 신경제개혁, 세계화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도 문화되는 경제성장정책을 다시 끌어올리는 목표이며, 개발독재국가 하에서 특혜받은 재벌기업에 다시금 특혜적 지원을 하는 '신성장노선'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정부는 성장론에 입각한 대재벌정책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했는데 이는 재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론에 입각한 불가정적으로 가격저하를 추진하면서 물가불안을 부채질했다. 아울러 성장론에 입각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전략산업'만을 육성하면서 농업 등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해쳤다.

결국, 정부는 전체 국민경제가 IMF에 의한 사실상의 관리체제에 놓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사실상 외국에게 넘겨주게 되어버렸다.

IMF와 그의 요구에 철저히 따르는 김대중정부는 단기적으로 긴축정책을 통해 재정장, 고실업이 불가피하지만 국제수지자격을 해소하면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지배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자유화와 대외개방정책으로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전적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국민들을 몰이간 '경제성장'의 결과가 다수 국민들을 위한 생활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느냐의 문제이다.

증대시키면 장기적으로는 고도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에 대해서 정부가 사후적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통일을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구조조정이 성공함에 따라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도적인 실업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성명하고 있다.

과연, 이 논리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일까?

외국자본이 침투하기 쉽게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세계경제질서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켜, 앞 그대도 강한 나라에 약한 우리나라를 잡아먹히게 하려는 뻔한 수작인 IMF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정부도 웃기지만, 이 새로운(?)논리 속에서 또 우리나라의 궁극적 지향은 고도성장의 길이라고 불어가는 구태의연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으로 재벌과 금융의 지배구조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이 관철되면 기업과 금융부문에서 미증유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독점화 경향은 보다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인수합병과 독점화운동은 재벌을 상호경쟁에서 벗어나 외국 독점금융자본과 국내재벌 사이에서 독점화 될 것이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지배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조건하에서 정부와 재벌 또는 외국독점자본간의 유착관계는 더욱더 공

고해질 것이다. 한 마디로 그들의 힘이 훨씬 더 배기되어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사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 경제성장을 예정처럼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고용은 창출되지 않을 것이다.

산업예비군의 유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로써 경제위기 시기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대량실업사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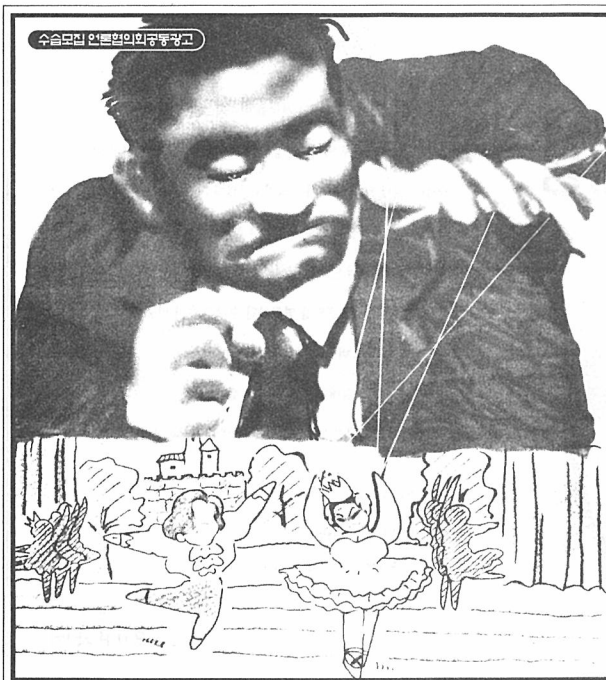
실업률이 20%를 상회하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해고조언이 완화되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경제가 잘 돌아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조차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재벌에서 말하는 '경제성장'의 논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결코 이겨낼 수 없으며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해원

(간세기경제문제연구소)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외대학보, 『외대』교지, The Argus가
2학기 수습위원 및 수습기자들 모집합니다.

문 의

외대학보	서울 961-4152	용인 0335/30-4112
『외대』교지	서울 961-4409	용인 0335/30-4167
The Argus	서울 961-4153	용인 0335/30-4113



임정민 윤인 부총학생회장 옥중 인터뷰

“탈퇴서 쓰지 않은 건 저의 신념입니다”

“책보고, 운동하고, 신문보면서 그냥 별 탈없이 지내요. 주로 19대 총학생회를 꾸리면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돌아보죠. 확실하게 안게 나가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간혹 생활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별 탈없이 지내는데 점을 강조했지만, 그의 대담속에서 기약없는 좌옥 생활의 답답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수배생활을 할 때도 학생들을 만나지 못해 미안했었는데, 감옥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히 하고 한창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가 갑갑하네요”라며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미안해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총련 개인탈퇴 문제에 대해 임군은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내 미명으로 탈퇴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민주적인 선거로 한총련이 건설되고 제가 부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인데, 학생들의 동

의일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라며 대외의 개인탈퇴 문제는 정권의 비논리적인 한총련 측이기의 일관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말할 것도 없고 23년을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조사에서 “탈퇴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탈퇴 사실을 부인했다. “탈퇴사실을 인정하거나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크게 웃으며 “물론 그날 인정하고 나오면 편하죠. 감옥에서 활동의 재약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나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탈퇴서는 종이 한장의 의미라 아니에요. 탈퇴서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감없이 대외의 활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신의 신념을 꺾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

다.” 학생들이 부여받은 책임, 부당한 한총련 이적규정에 맞서 대외적으로는 직책을 맡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같이 일하던 총학생회 일꾼들의 격정

도 상당했다. “학생회 일꾼들이 많이 힘들게 예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적으니까... 상황도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제가 있었으면 그나마 힘든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미안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일꾼들이 힘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라며 학내 재단문제와 한총련 이적규정의 문제로 상황이 힘들수록 대중의 토대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5년간의 면회와 끝을 알리는 변호사가 물리고 “면회가 끝났으니 들어가지”는 간수의 차가운 말이 이어졌다. 간수에게 팔이 잡힌 채 면회장을 나가면서 그는 “한총련의 부당한 이적규정 문제는 반동적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가능한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요”라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면회장이 문 닫히기 직전 그는 기자를 향해 큰 목소리로 “고생하세요”라는 말을 외쳤다. 그말은 수많은 양심수의 석방과 공판의 재약으로 그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감옥밖 우리의 몫임을 일깨워 주는 듯 하였다.

김길진 기자



과거 부정한 정권에 저항하다 수배처지를 받은 학생운동권인 수배자 8명은 “과거정권의 차원에서 수배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농성단, 천막 모습.

‘끝없는 터널, 이제 밖으로’

수배해제 촉구 농성단, 조계사에서 30일째 농성중

“수배생활은 참살 없는 감옥이다. 더구나 기약 없는 수배생활은 무기징역 감옥생활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다.” 조계사에서 만난 한 수배자에게서 나오는 김경삼 정권시절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 8명은 “정주수배제”를 주장하며 지난 8월 9일(일)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다. 여러 노동자 농성단의 전신으로서 ‘수배해제’를 주장하는 수배자 8명은 “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는 현재의 수배해제 투쟁의 궁극적인 지향, 목표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우리가 형을 더 적게 받거나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욕구로 모인 사람들이 아닌 만큼 원칙을 놓지 않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삼(57) 한총련 언론사(활동)장도 “농민가 형을 더 적게 받거나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욕구로 모인 사람들이 아닌 만큼 원칙을 놓지 않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농성장에서 만난 권오현(민주와 실천가 농성운동의 공동의장)씨는 “수많은 양심수와 규정에 철폐되어사까지 범했던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반발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농성단을 통솔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전광수(노동)의 입장은 공권력의 탄압에 맞서 약한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정권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는 인권과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투쟁으로서만 가능합니다”며 농성단의 활동을 지지했다. 신도 김경재(삼당, 40)씨는 “한대중노동자 농성단이나 학생 농성단의 한미(조계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한 정권의 잘못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의 실상을 꼬집었다.

“끝없는 터널, 이제 밖으로”라는 절망한 터널을 걷는 악몽,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항상 쫓겨다니야 하는 기약없는 수배생활을 수배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비유한다. 이제 그들은 터널의 끝에 다다를 수 있기를, 더 이상은 정치 수배자가 생기지 않기를 ‘국민의 정부’에 바래본다.

이진영기자

만도기에 문학지부장 한상배씨를 만나

“공권력 발동, 형평성 잃었다”

정부, 회사 노사협약 파기 불구 노조에만 수배·구속 남발

정리하고 문제로 전면파업 18일째를 맞고 있던 만도기에 전국 7개 사업장에 지난 30일(목) 새벽 일제히 공권력이 투입되어 농성중이던 노동자 2000여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사파단체는 성명서를 발표, 전파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 폭력과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 발동 등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본보는 만도기에 개 지부 가운데 하나인 문지부 주 지부장 한상배(34)씨를 만나 파업 이유와 공권력 투입 상황 및 미래 입장, 이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상배

만도기에 파업 결의에 대해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부도 이후 회사측은 회사 정장과 문지부 임직사장과 정리에 대해 등을 돌렸다. 이후 노사협약에 노사는 올 2월 23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인위적인 정리에 대해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대가로 노조는 학자금, 주택자금, 주·이간 간식지급, 종합건강검진 중단 등에 동의하고 통상임금의 30%를 반납하는 등 정리에 없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배를 꾸는 고통을

감수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7월 23일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1,100여명이 넘는 수의 정리에 대해 통보했고, 8월 17일부터 전국 7개 사업장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이 노사협약을 이기면서까지 정리에 대해 강행하려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만도에는 97년 3/4분기까지 900여명이 넘는 휴직자를 냈던 회사였다. 사측은 한라중공업에 6천여원을 빌려주는 등 휴직기업이던 만도기계를 차인점점과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휴직 부도에 이르게 했다. 이후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는 복지 부문 축소와 임금 삭감 등을 통해 회계상계비 정도만을 받으며 일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정리가 나빠 지금 수요가 힘들어지자 일방적으로 정리에 대해 통보했다. 또한 정리에 대해 통보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의해서만 만도를 외국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 만도 집업 이후 하루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가 만도기계를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김대중 정권 취임 이후 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건 처음인데

김대중 정권을 믿었다. 공권력이 이렇게 쉽게 개, 그들이 무자비하게 투입될 줄은 몰랐다. 한대중정권 문제와 관련 부문의 해직 및 노사자율원칙에 어긋난다면 재법과 인본이 없었던 여론몰이와 이에 대한 김대중의 유감 표시 이후 불복으로 만도에 된 것이다. 정부가 중재를 하면 노사자율원칙에 어긋나고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것은 노사자율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부의 공권력 발동이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지난 2월 노사간에 합의된 고용안정협약에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협약을 파기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측에 대한 처벌은 커녕, 노동자들에겐 만도·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한대중정권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 중재를 하면서 우리에겐 일할 그런 노력도 없이 공권력을 투입, 사측 편만 들어온 것이다.



이후 계획은

현재 7개 공장의 사안과파괴를 중심으로 가혹대처위가 꾸려졌다. 노동자도 노동자지만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파과정에서의 폭력 만행들 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임 신 97년의 입사부를 받고 진입했다는 기억, 애기를 입고 있는 가족에게 곤봉을 휘둘러 18개월된 아기 머리가 깨졌다. 현재 아들과 남아있는 노조간부, 풀러나는 조합원 중심으로 출근금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직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부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관 9월 14일(월) ~ 9월 19일(토)

처음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관 선포식
대 : 9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앞서 호헌 구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대 : 9월 14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목요기도회
대 : 9월 17일(목) 오후 8시 장소 : 기독교청년회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반발과 합동 천도제
대 : 9월 18일(금) 오후 3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일상의 거리

조성만 기억 문화제
대 : 9월 14일(월) 오후 5시 장소 : 조성만 거리 (충정위당 앞)
전대일 거리에서 어느 고통받은 전진책을 대회
대 : 9월 18일(수) 오후 5시 장소 : 전대일거리 (충정위당 앞)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대 : 9월 14일(월) 오후 8시 장소 : 삼전로대교구 내

부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대 : 9월 14일(월) 오후 8시 장소 : 부산광역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대 : 9월 14일(월) 오후 8시 장소 : 부산광역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양심수 전원해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대 : 9월 14일(월) 오후 8시 장소 : 부산광역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대 : 9월 14일(월) 오후 8시 장소 : 부산광역시

마지막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대 : 9월 17일(목) 3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주최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02-021-3202) 후원 : 한겨레, 일간지, 사설지, 방송사, 노동조합



한민진 영남위원회 조직자 등 공동대대위원회는 이 사건이 '현대자동차 정예군'을 들고싸고 갈등이 증폭되는 시점에 발표되고, 해맞이수사자를 진행하는 틈에 비추어 조직의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울산노동운동 김형철은 민선구상정당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월 22일 전직 구속됐다. 사진은 지방선거 다음날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함께한 김형철 울산노동운동(앞줄 세번째)



지난달 31일 노동운동 탄압 공동조직 부산-울산 대학위원회 회원 50여명은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월간조선 9월호의 김형철 피의자가 지목받은 장막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한민진 영남위원회' 사건 내막 해부

짜여진 '각본' ...그러나 헛점투성이 울산 노동운동 탄압 위해 또 '이적 딱지'

지난 7월 22일 새벽, 부산·울산지역에서 사회단체 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벌어졌다. 바로 이어 23일 울산 노동운동장 김형철 현직자가 체포되었다.

김형철은 사후에 '반체제노동자'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란 합은 '정부를 침략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의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그렇다면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중간보통문은 중심으로 수사과정 등을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1. 사건지체의 의혹

첫째, 우선 단체명에 대한 문제이다.

7월 22일 부산경찰청이 가족들에게 제시한 김형철 피의자명에는 1989년 3월 서울에서 결성된 지하혁명조직 '반체제노동자'라 하였다. 그러나 21일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한민진 영남위원회'로 되어있다. 그후 공식적 발표를 거치지 않았으나 구속자들에 대한 면회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조직명이 또 다시 '조선노동당 영남지역당' 또는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부산보안수사는 조직명조차 명확하지 않은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조직원들을 긴급체포한 것이다.

둘째, 핵심조직원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3년동안 기수사자를 통해 진행된 사건이라고 자신만만하던(7월 22일 기자회견에 출연 이야기)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그 핵심조직원으로 긴급체포했던 이형규(전 현충원 조직부장), 이의철(전 부산 영남지방경찰청장 부 사무국장)를 21일 새벽 영장청구도 하지 않고 풀어주었다.

3년 동안의 기수사자를 통해 적발된 반국가단체의 핵심조직원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하였는데 영장청구도 할 수 없었다면 정말 급박한 일이 아닌가?

셋째, 합법적 활동이 반국가 활동으로 둔갑하였다.

7월 24일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주요활동사항을 하나 하나 반박해 보자.

① 경찰청 시기 부산·경남 각 광역지회를 수립하여 지역에 미군기지 한 개씩을 지점, 행정기관, 주민분포 등을 본거지로 삼을 수 있다.

② 경제지표, 행정기관, 주민분포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라고 한다. 또한 미군기지 현황들은 부산에서 대중적으로 발간되었던 '하이라이더'에 관한 투쟁에서 담겨진 준비된 자료가 아닌가.

③ 울산지역 12개 단체, 부산지역 7개 단체, 양산지역 1개단체 등 재야 합법, 반합법 조직에 조직원을 침투 및 외국 지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④ 체포대상자에는 '희망의 젊은 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 조직원들을 모두가 '희망의 젊은 연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구속자 중 일부는 '희망의 젊은 연대' 회원이 아니며, 이적활동의 내용도 없다. 더욱이 부산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표기했던 단체명을 함부로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명에 대한 명단발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참고: '희망의 젊은 연대'는 창립시 심한 수사와 검열을 시외로 하여 참여하여 지역 건강장 30여 개를 운영하여 모인 이 단체가 한 후 지방자치에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축하해 주었던 모임이다.

⑤ 유사시를 대비하여 친목단체 20여개를 조직화하고, 회원단체 50여개를 동조지원을 목적으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⑥ 친목단체 20여개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지역사랑 동호회, 조가족회, 주부문화회 등 대중단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가입 또는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은 모두 외곽지단체이거나 유사시 지원세력으로 보는 어찌구무 없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⑦ 97. 4월 정부 현재까지 경찰청 보위부 정경사로, 모금활동을 하여 울산지역에서 30여 5천만원, 부산에서 1988천만원 등 총 5033만원을 모금 북한통도품기 운동부서에 송금하였다고 한다.

⑧ 김형철 보위부정경사로 모금활동을 하였지만, 5033천만원이던 엄청난 액수를 어떻게 모금할 수 있었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금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반국가단체의 수뇌(국가보안법상 북한은 가장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를 보위하는 투쟁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담담한 전국연합과 북한통도품기 운동부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자국민 중간검열이 된다.

통도품에 대한 사랑으로 참여했던 북한통도품기 운동들은 공안단체는 김형철 보위부정경사로 보고 있었음을 드러낸 예이다.

⑨ 98. 4 민주노동당원 선거시에는 조직에 자정모임을 주체, 전국순회선거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98. 12 - 97. 2월까지 노동운동개성, 노동자 생존권 확보투쟁 집회 시위사 수회에 걸쳐 그 활동을 지도하였다고.

97. 4 - 8월까지 김형철 국민CAP(국민회사) 분규사 부산노동자의 건부를 과전, 배후조종한 바 있고,

⑩ 민주노동의 활동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민주노동이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순세력 등의 배후조종 때문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아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속자들에 관한 노동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볼 때, 이들이 이반사건을 통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예가 될 것이다.

2. '한민진 영남위원회' 사건의 배경은 무엇일까?

'한민진 영남위원회'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배경은 부산경찰청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나 나름대로 수사기록 등을 통하여 추적해 보자.

7월 22일 금요일, 23일 민주노동 산하 노동운동자들과의 피업을 주도하고 이적단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이번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2일 이전에 접하게 않았을 까? 더욱이 3년동안 '기수사'했다는 데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7월 21일이라는 시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21일은 전국 7개지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날이다. 사건에 대한 파장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정리하고 반대' 투쟁의 파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 바로 보궐선거의 결과에 온 국민이 몰려있는 22일 새벽이 가장 적절했던 시간인가?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리하고 반대' 투쟁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영남지역 또는 부산·울산 지역에 한정된 사건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발표내용을 보면 과거 서울에 국학학연맹(이철 구학원), 고려대 반미학연, 반체제노동자 관련 공안단체자들이 주축이 되어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으로 88. 4. 서울에서 전국 각지 반체제노동자 결성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92. 3. 16 영남위원회로 재변하고 부산·경남지역에 핵심조직 20여명으로 혁명지도부를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월간조선 9월호에 우정환기자와 수사실무 책임자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다른 지역에도 이들과 연계를 당이 있다는 것임이 분명"이란 질문에 "조금과 결연자 20여명으로 이적 조직이 존재하리라 믿는다"고 하고 있다.

즉 이번사건이 단순히 영남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과 민족민주운동전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사건이 일부 보수기독교세력과 공안세력이 반격을 위한 작정이 아닌가라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시기가 있었다.

월간조선을 보면 수사실무 책임자 '부산지역 공안부 검사들과 우정환' 집담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고, 1997년 4월 연방무도 일제였고, 98년 6월 (X사)를 낸다(시기는 9월 이후로 미칠 것을 요청)고 하고 있다.

즉 이번사건은 일부 공안세력에 기독교인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김대중정권의 인기부, 검찰, 경찰 모두 함께 준비한 사건이었던 것

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 바로 보궐선거의 결과에 온 국민이 몰려있는 22일 새벽이 가장 적절했던 시간인가?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리하고 반대' 투쟁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영남지역 또는 부산·울산 지역에 한정된 사건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발표내용을 보면 과거 서울에 국학학연맹(이철 구학원), 고려대 반미학연, 반체제노동자 관련 공안단체자들이 주축이 되어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으로 88. 4. 서울에서 전국 각지 반체제노동자 결성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92. 3. 16 영남위원회로 재변하고 부산·경남지역에 핵심조직 20여명으로 혁명지도부를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월간조선 9월호에 우정환기자와 수사실무 책임자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다른 지역에도 이들과 연계를 당이 있다는 것임이 분명"이란 질문에 "조금과 결연자 20여명으로 이적 조직이 존재하리라 믿는다"고 하고 있다.

즉 이번사건이 단순히 영남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과 민족민주운동전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사건이 일부 보수기독교세력과 공안세력이 반격을 위한 작정이 아닌가라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시기가 있었다.

월간조선을 보면 수사실무 책임자 '부산지역 공안부 검사들과 우정환' 집담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고, 1997년 4월 연방무도 일제였고, 98년 6월 (X사)를 낸다(시기는 9월 이후로 미칠 것을 요청)고 하고 있다.

즉 이번사건은 일부 공안세력에 기독교인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김대중정권의 인기부, 검찰, 경찰 모두 함께 준비한 사건이었던 것

이다.

3. 정리하며

위에서 봤다는 이번 사건의 배경과 조직의 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건의 개별적 사안만을 두고본다면 조직의 존재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사건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의 존재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할 것이다.

한편에도 보정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적 채워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수사발표내용에서 주요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활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공안단체의 사상에 의해 그자라는 것)에 의해 해)에 따라 합법적인 활동도 정부를 침략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진정한 의미에 바로 북한통도품기 운동이 김형철 보위부정경사로 규정된 것이다.

운동의 합법영역이 강조되고, 전보전열의 활동들도 합법적 활동을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기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월 28일 현재 구속중인 양상수 (4백20명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이 2백60명 (66.7%)이라는 사실-민간집계-만으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즉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생장(사상)의 자유마저 박탈되는 것이다.

박성철

《노동운동 탄압·윤공조직 분열을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 상향심장》

방북취재 불허 규탄 공동광고

“통일은 별로 중요 하지 않다”

“통일은 돼도 대학생은 안돼”

통일부를 보면 통일이 안보여요

전대기련 방북취재 성사로 통일, 이젠 보이게 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방북취재 불허에 대한 전대기련 규탄 성명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2천 대학신문기자들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김대중 대통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방북취재 시위를 성실성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방북취재는 어떠한 사회·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남북의 대학생 및 주민들의 생활을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대기련의 방북취재 시위는 정부와 통일부의 무성의하고 반통일적인 대응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대기련은 3차례에 걸친 집시시도로 지난 7월 16일 방북 집시시도 성사되었으나 정부와 통일부에서는 단 한개의 자세한 설명도 없이 한 가지 불허 통지시도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최근 집시시도 사건으로 남북간의 경제와 통일대응전 등으로 북한의 통일선 전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궁극적인 변명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통일부의 이러한 불허 결정은 다시금 순수한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의 자유를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구시대적 행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언론매체를 통해 '대학 학생 및 대학생들이 북한 대학의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순례를 중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러대학의 학생, 교수들과 각 사회단체로부터의 추천서와 지지성명서까지 받았던 방북취재를 불허한 것은 통일부의 반통일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대기련은 2천 기자들은 이러한 정부와 통일부의 반통일적이고 반통일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방북취재가 성사될 때까지 운동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북취재 성사를 위해 추천서를 제출한 여러대학 학생들과 교수님들,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다신 분들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대기련 대학신문기자들은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전대기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통일부는 전대기련의 방북취재 시위를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구시대적 행태인 방북취재 불허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방북을 허가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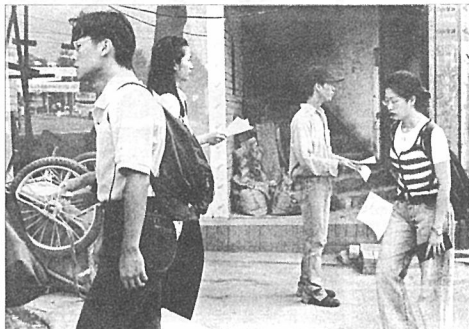
-남북간의 화해를 가늠하는 시대의 역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헌법 당시 공력시정인 남북화해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재 단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② 학생이 선두에 나서야 한다

공동연대투쟁이 절대적 해법

대학운위 · 단대 학자위 건설 · 외대발전장기계획 수립 등 필요



재단투쟁과정중 과밀군도에 의해 이후 상황을 듣기보다는 유인물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진은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다.



지난 학기 재단비리를 적절하고
진정한 외대발전을 이룩하고자
학원 3주제(교수, 학생, 직원)는 하나로 뭉쳐
‘부패비리 재단이사진 소년취소’
‘학술준 전 재단투위서 사법처리’ 등
핵심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재단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역시 학생들이었다.
4.19, 6월항쟁 등의 역사는
시대를 존재하고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의지와 신념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것을 해결하기위해
언제나 학생들이 가장 선두에서
투쟁으로 나섰고 있음을 잘 증명하고 있다.
이렇듯 이제, 어느 곳에서나
모순이 자리잡고 있으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학생들의 의지는
우리학교 재단투쟁에서도 잘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외대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세력은
역시 학생들이 수 밖에 없다.
재단투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서있는 지금
한 시점에서 본보는 이후 외대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시급히 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서,
외대발전의 진정한 민주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첫번째 양배터 공동연대투쟁으로 재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배터 총학생회의 지난 학기 재단투쟁에
있어 가장 큰 오류점 중 하나는 공동연대투쟁
을 하지못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투쟁 참여와 의지에도 양배터 공동연대투쟁
이 성사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
아있다.

재단투쟁이 어느 한 배터만의 투쟁이 아
닌 서로 관계 맺어가는 투쟁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학기 재단투쟁을 벌
이는 과정에서 공동연대투쟁에 결정적인 약점
함을 깨치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지난 5월 30일 이루어진 이숙경 전
재단이사장과 당시 총학생회장, 서울배
터 총학생회간의 합의에서 용인배터 총학
생회가 배제된채 진행되어 선언문을 작성한
일이다.

무엇게 용인배터 총학생회는 용인배터
총학생회와 배제된 채 진행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행동과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배터 총
학생회는 유감의 표정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양배터 총학생회는 공동연대
투쟁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전까지 투쟁했던
방식대로 배제된채 투쟁을 벌였고 이로 인한
한계점들이 드러났다.

현재 양배터의 3.30 선언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30 선언을 기본틀로 해서 이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배터-

“용인배터 총학생회가
배제된채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무효일 수 밖에 없다”
-용인배터-

이에대해 용인배터 학원자주화투쟁특별위
원회(학자투위) 위원장 인문대 학생회장 정승
환(인문·사학 4년)은 “용인배터 총학생회
가 합의 당시 없었으므로 우리의 입장은 ‘3.30
선언은 무효’이다”고 단했다.
또한 서울배터 외대발전학자추진위원회
(외발학추) 위원장 정승환(사학·노어 4)은
“3.30 선언은 지난 학기 재단투쟁과정 중 이숙
경 전 이사장과 조규현 현 총장이 유인하게
서명을 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

는 내용이 있어서는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물이다”며 “이 선언문을 기본틀로
하고 용인배터 총학생회의 입장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이 이후 외대발전 방향을
잡는데 더 좋은 방향일 것이다”고 밝히 이후
양배터단대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 문제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배터단대 대학청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양배터단대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다. 재단비리 해결이라는 하나의 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배터 학생회에 있어
서는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야 할 문제다.

덕유 양배터 총학생회장 의사소통 문제
는 곧 재단투쟁 문제가 야기화될리라고 하
나 복지사단, 세계민속학문화재단(세민지)
등 함께 고민하고 진행할 행사, 무형들이 상
당히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들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
는 외대발전 장기계획 마련에 있어서도 양배
터의 의사를 조율하고 적절한 대안이 무엇
인지를 고민할 실질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실질적 논의기구가 건설된다면 지난학기
‘자폭동 이론이 옳은가, 원상 이전이 옳은가’
식의 소모적 논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 대학운영의 건설 촉구

학내에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교수, 학생,
직원)이 모두 학교의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민
주적 운영기구로 ‘대학운영위’ 건설은 필수
적이다. (본보에서는 대학운영위 또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다룬바
있다. 718호 참조) 민주적 의사결정기구가 건
설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모든 결
정이 다시 재단이사회로 집중되기 때문에 재
단 이사회의 전횡이 발생하더라도 막을 수 없
고, 이런 전횡을 막기위해 이사회의 전횡에 의
해 이를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민주적 의사결정기구가 없
어는 지속적인 외대발전이란 말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이에 양배터 총학생회 역시 민주적 의사
결정기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속에서 양배터 총학생회가 어떠한 지위
와 역할을 가지고 행동을 펼칠지 고민해와야
한다. 지난 718호 10면 기획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먼저 민주적 의사 결
정기구를 건설한 조선대학교의 ‘내학자치협의
회(내학자)’ 정관을 기본틀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본보 718호 10면 참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민주적 의
사 결정기구를 계속 유지하고 결정된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을 제정해

야 한다.
특히 조선대의 경우 가장 먼저 민주적 의사
결정기구를 건설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유지하
지 못하고 현재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아있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정관
을 확실히 제정해야하며 또한 이 기구의 활동
에 대해 학생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지않으
면 안된다.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대학운영위’가 건
설되면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리고 총장 선
임, 재단 이사진 추천 등의 활동으로 학내 복
지사단부터 넓게는 외대발전 장기발전 계획까
지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
이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배터 학생회와
의 실질적 협의회를 통해 대화창구를 마련하
는 것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단대 · 과 학자위 건설 외대발전 장기계획 수립

지난학기 재단투쟁을 벌이는데 있어 가장
중심인 학생들과 학생회 간의 의사소통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과 학생
회를 묶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부
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재단투쟁 상황에 대해 유인물들
을 통해서만 알게되어 정확한 상황파악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는 용인배터에서
서 심각하게 나타났던 부분이다.

지난 학기 용인배터 총학생회는 서울배
터 총학생회와 비해 일관도 수준도 적고, 재단투
쟁 상황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의(중앙위)에
서 논의된 내용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되
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단순히 학생회 일꾼의 많고 적음을 따
나 중간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계가 없었던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각 단대 · 과 학생회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학자투위)가 건설이되지 않아 이를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원인이 있
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
해서라도 각 단대 · 과 학자투위 같은 실질적
의사소통기구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크개는 외대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의 작은 의견까지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노력해야할 부분이 외대발전 장기
계획 수립을 시급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서울
배터에서는 사법투쟁, 용인배터에서는 학
자투위와 중심이 되어 이 문제에 대한 연구자
업을 발간하고 동시에 양배터단대 의사 수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외대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명재권 기자

미사일이길 바라나?

0...얼마전 북한에서 대포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 일, 남
한 정권은 전쟁 위험이리느니 대응을 하
겠다는느니 떠들썩. 그러나 며칠후 북한이
‘정전 50돌을 맞아 인공위성을 궤도에 건
입시킨 것’이라고 밝히 크로니클자 진
국권이 원화되어 다량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미, 일, 남한군과 그리고 언론들
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이미
분명히 미사일을 쏘았을 것이라고 주장
하는데, 신문들 보면 크로니클자 한숨을
내쉬며 한다. “북한 미사일의혹보다 미
국과 정권, 언론이 조장하는 분위기가 더
상관할까...” (진)

0... 스님 크로니클자, 산에서 몇 년간
수행을 마치고 조계사로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분명 강간은 조계사인데 부처
가 있는 대웅전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
유인국 노동자들과 정치수배해들을 주장
하는 한총련 학생들의 능성전략 때문이
였는데... 결국 천막에서 쉼터로 크
로니클자 한마디 “웃겼고요 어찌에 나
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것을 보니까
몇 년간 산에 들어간 사이 나라가 망해
버렸나 보구나. 나무이마터...” (겸)



0...우리나라가 IMF 식민지 된 것은
일제해방후에도 친일 매국놈들이 정계
곳곳에서 나라를 주물럭거린 것 때문이
고, 우리학교 사학비리 재발 가능성은 학
자투쟁 승리 후에도 친일매국 고지환들
이 학교 곳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지. (승)

0...98년 대한민국 돌아가는 예기 한
번 들어보소. 월급과 복지약속도 다 깨
가며 정권교체고만 하지 않겠냐고 고용
협약 맺었고 회사측과 1000억에도 발발
하는 미수권에 새끼만 노동자 굴러대는
자식같이 굴며 죽이지 않고서도 버티고
양 들어주던 노동자가 있었소. 그레놓고
는 일반적으로 협약 파기한 회사측과 굴
어줄 수 없는 없기에 기계를 멈춘 노동자
가 있소. 누가 잘못이요? 가족이 함께 계
는 능성장에 공권력을 보내 인신부의 배
를 밟고 4살짜리 내 자식 머리를 곤봉으
로 쳐 깨뜨린 정권의 논리대로 정말 우
리가 잘못이요? -만도기보 능성장에서 (회)

강(強) ≠ 선(善)

비둘기철판

왕 산 골

알립니다

“언어학의 나눔 행사입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신나는 한마당
때: 27(일) 일찍 오세요
(언어학과 학생회)

원주 학우회 합니다.
연락처: 012-382-8945
꼭 연락! 안오면 문전배로 보내버림.

축하합니다

102(목) 인문대 사무국장 김재훈 오빠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대 선진 꼬마가)

이 문 별

알립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순박에서 영어교과와 영어연구회
‘우리가서’의 5회 정기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고,
장소는 대학원 건물 소강당입니다.
많이 와서 관람해 주세요.
때: 24일(목)과 25일(금) 6시 30분
26일(토) 4시.
(우리가서)

모집합니다

이직도 동아리를 찾고 계십니까.
AIESEC에서는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국제교류전문학생단체(AIESEC)
정기모임은 매주 목요일 늦은 6시 학생회관 4층
(AIESEC)

봉사동아리 실천사랑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지회는 “너를 아는 삶”을 품소 실천하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는 활동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오류동에 위치한 연세사회복지원에서
원아학습도
모집기간: 23일(수)까지
연락처: 학생회관 4층 961-4569
(실천사랑)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 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 송비평 - SBS TV사극 '홍길동'

이름만 홍길동 아닌가요?

'시청률' 때문에 원작정신 못살린 방송의 무책임성

강준만 교수가 쓴 '김대중 죽이기'를 떠올려 본다. 그리고 주말 낮 때에 다시 방송(재방송)하는 사극방송 '홍길동'을 떠올린다. 피식 웃음이 나오다기도 북받치는 심정에 주먹이 부르르 떨기도 한다.

강준만교수가 '김대중 죽이기'를 세상에 꺼내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패권주의를 다시보게 되었다. "...죽이기"가 호를말(우렁말)까지 되며 크게 우리 생각을 뒤집었다고 할까? 이 책은 우리 사회와 언론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놓고 벌인 온갖 협박과 뒷거래(유세)를 낱알이 밝혀내고 이를 비판했다. 그러하여 또 다른 김대중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했으며 뒤돌아 이 나라 정치판을 제대로 보라는 계몽성을 던져주었다.

서울방송은 '홍길동'을 내보내기 앞서부터 문제가 되었다. 전남 정수군에서는 한 해 앞사부터 홍길동을 문구화하는(캐릭터화) 일을 벌여 왔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정수군이 홍길동을 난 곳이라는 설이 드세다. 그리하여 그전대 홍길동 그림을 보면 아가씨 기하며 귀엽기도 하다. 그런데 서울방송이 그려내고 문구화하는 홍길동을 보니 이는 일본 무사 내가 물론이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일본 무사 홍길동'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이미 오랜 계몽과 연구로 문구화하는 일을 가로채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얼마 앞서 서울방송이 철학을 맞았는지 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방송물이다. '홍길동'을 방송물로 내보낼 때는 다른 사극과 마찬가지로 사시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에 맞게 새로 덧칠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만 서울방송 '홍길동'은 무엇이 사실로 하고 무엇으로 덧칠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름과 활빈당 존재, 홍길동 무에 숭배하는 그나마 사실을 살리는 듯하지만 이야기 흐름과 내용은 완전히 뒤바뀐 느낌이다. 활빈당에 홍길동이 찾아가 도적떼를 혼내주고 지금 까지 벌여온 도적질이 아닌 민중을 괴롭히는 관복인과 종족임을 도적들 혼내주어 재물을 도로 민중에게 돌려주는 활빈당원에게 '민세 살상' 하며 활빈당을 열고 그 '민세 살상'하는 관에 주정하는 이가 나오는가 하면, 무수정당 전담대회는 듯한 분위기. 활빈당에서는 사람을 해하면 관복이라 따스하다. 그 힘에도 서울방송 '홍길동'은 사람을 미꾸 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재물을 벌으며 여자를 사이에 끼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가 물건인가? 사이에서 재미를 넣어 '사람살' 하듯 끼어줄까? 원금 '홍길동'에서는 마지막에 이르러 대마도 장별까지 앞서 반인반수 무리를 전멸시키며 반인반수 무리가 노예처럼 부려먹고 갈탈하러 마을에서 쫓아온 여인 셋이 나온다. 홍길동은 이들도 반인반수 무리인 줄 알고 죽이려 하다 그들을 해소원을 듣고 사람이란 줄 알아 그들을



셋을 아내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원작에 충실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새로 꾸미는 방송물이라면 적어도 사실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곳과 살릴 곳도 있다. 더불어 '배려'를 하든 다시 꾸미든 무언가 특부러지게 그려낼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서울방송에서 내보내는 '홍길동'은 '홍길동' 원전에서 말하는 김대중과 혁명, 투쟁성을 모두 누그러뜨리고 원작에도 없는 사색색을 입습아 '홍길동'이 여자인 밝히는 무뎡한데다 정치가, 기원하고 앓된 모습, 무애와 슬기로운 재를 주는 길동이 아닌 민포만 떠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구나 원작에 없는 인물들 잔뜩 집어넣는다면 그네들도 한껏 이야기를 살려야겠으나 원작 '홍길동'을 죽이는 데에만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뭐 '현대판 홍길동'인가?

'홍길동'을 어느 때 다시 그리더라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길동이는 시대에 따라 어찌할 수 없는 신분차별을 뒹고 일선이다. 뛰어난고 훌륭한 재주가 있으나 이것이 일금 이 아니면 역적으로 몰리는 재주가 되고 말아 나라안에서 팔치지 못한다. 이러한 억울함을 안고 민간 사회에서 문제가 된 활빈당에 흠뻑으로 들어가 이를 바로 잡는다. 이는 민중살이를 참답게 바로잡는 모습이다. 나아가 사회를 온통 속박으로 만들어 민중 목을 조르던 여악을 되돌리고 수탈하고 갈탈하는 곳 곳 권리를 혼내주어 죽이지 않는다.그네가 갈탈한 재물과 곡물은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더불어 종교폐단을 바로잡고자 행인사 비리를 낱알이 들어내 종교계가 빼돌린 재물도 다시 민중들에게 나눠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일금에게 민을 얻어 열외정지까지 오른다. 하지만 길동은 자신이 벌인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벌을 어겨야 할 한 일이거나 여 나라 열외정은 하지 않고 풀려나 나라로가 새 나라를 세운다. 여기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잘못을 인정한 인타개음이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을 빼고라도 지금 시대에 맞는 홍길동을 그리겠노라면 이같은 사상과 민중성을 생각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서울방송은 무언가?

서울방송은 오로지 '독재하는 지도자' 논리와 '비굴한 집요'와 많은 참모' 논리와 '복은 권리가 되며 뱀스럽다'는 외침을 논리를 세운다. 누구를 생각하는 방송물이며 누가 보려고 그리는 방송물인가? 나오는 이 모습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두루 살펴 웃이며 여러 소품이 생기기에도 않고 일본무사하고 같은 옷을 차려입은 활빈당-내용마저도 잔뜩 이지러져 있다.

꼭 이승희 생각이 나도록 한다. 낱말책(사전)을 지으며 일본 낱말책을 베껴다 놓고 일본 물건, 이름, 온갖 영어·독어·프랑스어 따위를 우리말 낱말이라며 올려놓고는 우리말 좋아하는 거라 하지 않은 '민중 옛센스 사정'.

서울 방송 '홍길동'은 꼭 그 꼴이다. 걸만 반지르르하고 지화자찬을 아무려 한다 해도 속내까지 꾸밀 수는 없다. 역사와 고전을 새로 꾸미거나 녹여내는 일을 함부로 해도 안되며 미구잡이로 해도 안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서울방송이 '홍길동'을 거침없이 만들어 내는지도 모르겠다.

최종규

(서울·네덜란드에 2)

원리 투고요즘입니다

흔히들 갈상하기 어려운 외대인의 작품을 찾습니다. 문예작품 사해 미술 만화 광고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찾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학생회주의 관정인 실용적 아닌 교육 교직원적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재학생 분에 한해서는 소문과 원고료를 드립니다. 모집분야 영아원에서 글까지 모든 문예작품 모집기간 매월 금요일
문 외 학생회 2층 학생기자실



사진수필

집의 반석이 없었다. 첫산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거기서 없는 농민의 모든 것을 그대로 그들은 목숨을 건졌으며 너무나 고마워했다. 개강과 세민전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왕산 친구들은 수해복구활동을 나갔다. 어떻게 오게 됐냐는 질문에 '덜렁히 외아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지난 3월(목)~4월(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진행한 용인배움터 수해복구 활동에서

임승희 기자

한 사람만을 위한 동화

바비가, 파도가 일렁이는 모퉁이에 조약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약돌은 못생긴데가 많도 하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조약돌은 섬을 바다 멀리인 섬을 사랑했습니다. 그 섬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의 시설을 문집했습니다. 그래서 섬은 바보의 조약돌 때리는 거들때까지도 있습니다. 조약돌은 섬에게 그대하기 위해 바다를 헤엄쳐서 왔습니다. 그러나 바보의 마도에 가로막혔습니다. 그해부터 조약돌의 가슴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는 해를했습니다. 파도가 그리고 바닷물이 섬과 조약돌을 연결시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조약돌은 멍을 그리고 파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바사 멍들 곳이 없게 되자 섬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삼켰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돌은 또다시 멍들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섬과 연결시켜주던 멍들이 그리고 파도가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돌변했습니다. 거세게 몰아쳤고. 미련이라는 거름도 묻고 왔습니다. 조약돌은 민물에서, 파도에서 도망치고 삼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조약돌은 문들 깨달았습니다. 물이 달아 모래가 되고. 모래가 달아 식민지 미치지. 섬을 사랑하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오늘도 그 바위가 조약돌은 꿈을 꾸는다. 언젠가 내물이 달아 먼지가 되면.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 사랑하는 섬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언젠가 벌이 괴다. 발톱발이 되어 멀어지는 날. 그 꿈은 이루어지다고...

윤여성
(법·법학)

뭐? 수습기자?

수습기자가 뭐대? 뭐? 98학번 새내기모집? 외대학보라... 우리학교 신문! 여러 학생기자라. 사실 한쪽이 '기자'잖아. 그럼, 한번 해보? 안돼, 전국도 천거야 하고 티팅도 있고... 난 바쁜 몸이라구. 뭐? 기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경험하고, 장학금도 나오고 해외연수도 보내준다고? 에이~ 난 그 정도에 만족하지. 뭐? 자유연락, 전문직필? 그래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언론의 힘. 그래! 나 외대학보 수습기자 할래!!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외대학보 수습모집광고

모집대상: 98학번 새내기
모집기간: 9월 23일(수)까지
모집전형: 간단한 논술 및 면접
모집부문: 대외부·사회부·문화부·사건부·회계부·광고부·민회부